

2월 국회 후반전 여야 '입법대전'

기초연금법·원격진료 등 주도권 싸움 치열

국정원 개혁·북한인권법도 주요 쟁점 부상

2월 임시국회가 16일로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쟁점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회에서 '일전'을 불사할 태세에서 양측의 공방전은 연일 수위를 높여가며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오는 7월 시행이 목표인 기초연금 도입은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고자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본이 허용을 위한 입법도 '의료 영리화'라며 반발하는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역시 2단계 개혁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동상이몽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사가 대언론 브리핑 제한 등 보안강화, 기밀누설 처벌강화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 처리가 불투명하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 법' 입법 의사를 보이면서 여야가 교집합을 찾는 듯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와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의 청문회에서도 계속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카드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공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간첩증거위조'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 여야간 입장차

정부·여당	야당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20만원 차등 지급	65세 이상 기초연금 도입 매월 20만원 일괄 지급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폐지) 위한 정치 및 부작용 막기 등	정치개혁 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원격 진료·의료법인의 자본이 허용	의료 원격 진료·의료법인의 자본이 허용(제3차 및 부작용)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개정·폐기 등 개정국정조사 권한 강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방송법 등 개정국정조사 권한 강화
북한인권보호단 독재 정부 지원 강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정
새누리당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정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안전행정부 등 청문회를 통한 대책 마련 척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보안법무 기획·조정권의 NSC 이관 추진
주택 개정 (부양가 상환부과 폐지)	부동산 권리 주택세 상환부과 폐지 (전월세 상환부과 도입)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 문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남북유럽 발전법 학교 비정규직 세법·사업법·관공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등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이낙연,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법' 대표 발의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가 국가정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우윤근·김성곤·이윤석·김승남·김선동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국가가 친환경 미래 산업

으로 정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수목원과 식물원, 공원과 달리 정원은 그 육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근거로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시는 연 48억원으로 추산되는 순천만정원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승용 "빗물 활용 섬 지역 식수난 해결하겠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빗물을 활용해 전남 도서 지역의 식수난과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삼각한 겨울 가뭄으로 수원지가 말라 전면 급수 중단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고풍 거금도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남 도서지역의 항구적인 물 관리 대책을 주진할 것"이라며 "우기 때 집중적으로 쓰러지는 빗물을 받아

징수율 20% 끌어올리고, 비닐하우스·축산 농가의 화재방지·가뭄대비를 위해 '빗물 저금통(10t)'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빗물 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이희호 여사 예방 'DJ프로젝트' 설명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16일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30분간 환담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재가 전남을 바꾼다"며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와 산업현장, 농어촌에서 전남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10만 인재 기후기 대중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전남 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전통산업인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소

중한 자산"이라며, "호남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2, 제3의 김대중 같은 인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장

임우진, '나는 바람을...' 출판기념회 성료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자서전 '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출판기념회가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회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색다른 형식으로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임 전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다운 운용과

도시, 미래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올곧게 담아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 "이 기록이 바른 길을 가고자 고민하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의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가 되길 바란다"는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간첩사건 증거 위조' 국조·특검 공방

민주 "국가기관 신뢰 뿌리째 뽑혀" 대여 공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증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2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조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즉각적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동 불가'로 맞섰다.

민주당은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

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라며 '선(先)국조-후(後) 특검' 실시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문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함께 이번 국조를 2월 국회의 최대 과제로 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4일 검찰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층에서 제출한 허통(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2006년 5월

북한에 입국했다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 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중국대사관은 지난 13